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복지국가 형성과정에서의 역사적 다이나믹과 최근 개혁 방향(효과) 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자문회의

□ 과제명

- 노르딕 모델과 대륙형 모델의 형성 및 변천과정 연구

□ 출장기간

- 2019년 4월 22일 ~ 5월 1일 (8박 10일)

□ 출장국가(도시)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덴하그(헤이그)
- 독일 보쿰(루르), 트리어
- 덴마크 코펜하겐

□ 출장자

- 여유진(연구책임자), 김미곤, 김기태(공동연구자)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2019년 4월 23일(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WBS(노동당 Thinktank)	Klara Boonstra	네덜란드 사회정책 발전 과정과 바세나 협약 이후 네덜란드 사회모델의 변형 관련 자문회의
2019년 4월 24일(수)	네덜란드 헤이그	▶ Social Economische Raad/SER	Roland Zwiers	네덜란드 사회정책 발전 과정에서 노사정 협의모델로서 SER의 역할과 성과 프리젠테이션
2019년 4월 25일(목)	독일 보쿰(루르)	▶ Ruhr-universitat	Martin Werding	독일 사회적 경제모델의 발전과정과 산업 5.0모델의 형성 배경에 대한 자문회의
2019년 4월 26일(금)	독일 트리어	▶ Trier-universitat	Hans Brown	독일 복지국가 형성과정과 통일, 저출산고령화, 이민자 증가 등에 대한 최근의 대응 경향에 대한 자문회의
2019년 4월 29일(월)	덴마크 코펜하겐	▶ Ministry of em- ployment	Thomas Moelsted Joergensen	덴마크 유연성 모델의 장단점, 현황과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회의
2019년 4월 30일(화)	덴마크 코펜하겐	▶ the Economic Council of the Labour Movement	Per Kongshoj Madsen	덴마크 복지모델의 유연안정성 모델 형성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에 대한 자문회의

2

출장 결과 보고서

1.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주요 통계 자료(OECD, 2018)

※ ()는 OECD 평균

- 인구 : 총인구(백만): 17.1, 노인인구 비중: 18.7%
- 경제
 - 1인당 GDP(000 USD PPP): 53.0(42.2)
 - 부가가치 비중(%)
 - 1차 부문 2.1%(2.5), 건설 포함 산업: 19.5%(26.9), 서비스: 78.4%(70.7)
- 중앙정부(GDP 대비 퍼센트): 지출: 42.5(40.6), 조세: 43.6(39.3), 총채정부채: 68.7(110.2), 순채정부채: 36.1(71.2)
- 대외 회계
 - GDP 대비 : 수출: 86.6(55.0), 수입: 74.9(50.5), 무역수지: 10.2(0.4)
 - 주요 수출품(총무역수출 대비 %, 2016)
 - 기계 및 운송 장비: 30.2, 화학 및 관련 제품, n.e.s.: 16.0, 식품 및 가축(live animals): 14.7
- 노동시장, 숙련 및 혁신
 - 15-64세 고용률(%): 75.9(67.7), 남: 80.4(75.4), 여: 71.3(60.1)
 - 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 79.7(72.1)
 - 연간 평균 근로시간(2016): 1,430(1,763)
 - 실업률(Labour Force Survey, 15tp 이상)(%): 4.8(5.8)
 - 청년(15-24, %): 8.9(11.9)
 - 장기실업(1년 이상, %): 1.9(1.7)
 - 고등교육 성취율(25-64, %, 2016): 36.0(35.7)
 - R&D에 대한 총국내지출: 2.0(2.3)
- 사회
 - 소득불평등(지니계수, 2015): 0.303(0.311)
 - 상대빈곤율(% , 2015): 7.9(11.3)
 - 중위가처분가구소득(000 USD PPP, 2015): 28.1(22.9)
 - 공공 및 민간 지출(GDP 대비 %)
 - 건강보호(2016): 10.5(9.0)
 - 연금(2013): 6.4(9.1)
 - 교육(1차, 2차, 2차후, 비고등교육, 2014): 3.6(3.7)
 - 교육 성과(PISA 점수, 2015): 읽기: 503(493), 수학: 512(490), 과학: 509(493)
 - 의회에서 여성 비율(% , 2016): 37.3(28.7)

(1) 네덜란드 복지국가 성격과 최근 개혁 동향

□ 네덜란드 복지국가 성격

- 기동화 사회 : 여전히 네덜란드의 특성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점점 파편화 되고 있음. 정치정당이 더 늘어나고 있으며, 우파 정당이 득세하는 등 기존의 정당이 작아지고 기복이 심해지고 있는 추세임.
 - 현재 네덜란드에는 17개 정당이 존재하며, 35% 중도 세력임.
 - 다른 나라에 비해 우파 정당이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정치적 상황 : 지난 선거에서 노동당 참패
 -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으며 오랜 시간 동안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음.
 - 전통적인 노동당 정당이 이민자 정당 등으로 분산되고 있음.
 - 이민자 자녀들이 성장하여 대학을 나오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으나, 계층 이동성이 정체되면서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소득은 평등하나, 부의 불평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네덜란드는 주택부채가 유럽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

□ 기동화 사회의 특성의 변화

- 19세기 중반부터 기독교의 다양한 교파(개신교, 카톨릭, 사민주의 등)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가 분화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기동화 현상이 발달하면서 종교 집단의 정치적·사회적 역할이 증대하였음.
- 특이하게도 네덜란드는 사회적 분절과 기동화가 코포라티즘의 전제조건이 되었음.
- 네덜란드에서 코포라티즘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노사정 3자 조정이 사회적 코포라티즘으로 발전되었고 1982년 바세나 협약으로 정부 주도의 코포라티즘으로 변화하였으며 1990년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적으로 변형되었음.
- 폴더 모델이란 해수면보다 낮은 간척지(polder)에서 비롯된 말로서 바세나 협약 이후의 네덜란드 사회경제 모델을 지칭함.
 - 간척을 위해 모두가 협상하고 협동해야 하며, 리더를 믿고 수렴하고 동질화 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현재는 20%만 노조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세계적 경쟁 속에 노출되고 있다는 위협을 받고 있음.
 - 이전과는 달리 젊은 사람들은 종교적 교파에 따라 사회집단이 구분되지 않고 있음.
- 현재 네덜란드에서 이민자는 대략 10%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인도네시아, 수리남 등 기존 식민지 국가의 이민자의 경우 이민자로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보다 많다고 할 수 있음.
- 발칸에서 1990년대에 이미 많은 이민자를 받았으며, 시리아, 이디오피아 등 난민도 많이 유입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대기하고 있는 이민자가 많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인터뷰이의 입장 : 이민자는 통제될 필요성이 있음. 노동 이민의 경우에는 좋은 노동력과 나쁜 노동력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음. 터키 등의 이민자는 집에서 모국어만 사용하는 등 사회와 통합되지 않는 모습

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체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 지식 이민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이민자 문제는 인권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연금

- 국민연금(AOW)는 거의 최저수준으로 기여하며, 연금 2층(소득비례 강제기업연금)은 노사가 함께 기여하는 방식임. 민간에서 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연금 형태로 연금이 지급되고 있음.
- 높은 수준의 보편적 기초연금, 소득비례 강제기업연금, 개인 연금의 3층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낮은 노인빈곤 수준을 달성하고 있으나 1층 연금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

□ 1.5세대 모델

- 네덜란드는 높은 여성경제활동참여율과 높은 비율의 파트타임 일자리라는 노동시장 형태를 통해 1.5벌이 모형을 구축하였음.
 - 이전 세대의 경우 대부분 1 부양자 모델이었으나 여성이 점점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서, 많은 파트타임 노동이 괜찮은 노동 형태로 인식되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봄.
 - 오히려 임시 고용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프리케리어트 문제가 제시되고 있음.
 - 장기 실업자, 질환자, 장애인 등 사회보장에서 커버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음.
- 실질한 경우 자영자로 전환하여 매우 비싼 사회보장비용 등의 부담을 안게 되고 이로 인해 임시·일용직 등으로 다시 전환하여 불안정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는 EU 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해당함.

□ 수출주도 경제

- 네덜란드는 대외 무역 회계가 GDP의 160%에 달할 정도로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음. 일부 산업이나 국가에 의존하는 수출 경제의 한계가 대두되고 있음.
-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좋은 점인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초국적 기업 또는 중국 기업 등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 EU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사회적 평등과 워라벨

- 우리나라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삼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임.

□ 결론

- 네덜란드는 안녕(Well-being)이 장점이나 안정적인 사회가 아니므로 많은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
- 동질적이었던 사회가 이질화 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함.
- 과거와 다른 상황, 높아지는 이질감 등을 연대감으로 극복해야 하나, 최근 이민자 문제 등 사회의 이질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음.

[2] 네덜란드의 사회적 협약조정기구 SER

□ SER 이란

- Socio-Economic Council (SER)은 기업가, 직원 및 독립적인 전문가 (크라운 회원)가 함께 협력하여 중요한 사회 경제적 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자문기구로, SER은 정부와 의회에 사회 경제적 정책에 관해 조언하는 기구에 해당함.
- SER은 또한 계약과 성약을 용이하게 함. 대표적인 예로서 에너지 협약 (Energy Agreement)의 설립과 국제 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룬 다양한 계약이 있음.

□ SER의 목적

- SER은 모든 사람의 사회적 번영을 위해 노력 :
 -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일하도록 함
 - 합리적인 소득 분배
- SER의 모토는 대화를 통한 지원임.
 - 본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독립적. 법으로 설립되었지만 정부기관이 아님.
 - 일반 실업기금(Awf)을 통해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간접적으로 지원
- 회사, 지회, 국가 차원 등 모든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사회, 경제정책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함.

□ SER의 기능

- 사회 경제 협의회 (SER)는 정부와 의회에 사회 경제적 정책에 관해 조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이 협의회는 또한 다양한 당사자들을 모아 IMVO (Internationa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관한 협약 체결하고 직원 참여 증진과 같은 행정 및 법적 의무가 있음.

□ SER의 구성

- 협의회는 33명의 위원으로 구성(11명의 사측 위원, 11명의 노측 위원, 11명의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왕립위원)
 - 사측과 노측은 자체 위원 임명
 - 평의회 구성원 임기는 2년(2018.4.1.-2020.3.31.)
 - 고용주 단체:
 - VNO-NCW(7석)
 - MKB NETHERLAND(3석)
 - LTO NEHTERLANDS(1석)
 - 노동자 조직:
 - FNV(7석)
 - CNV(2석)
 - VCP(2석)
 - 단, 소비자위원회(Consumer Affairs Commission)
- 협의회는 이사회가 채택한 권고, 탐구 및 결정을 준비함.
 - 대부분의 위원회는 협의회가 계속 논의하고 채택하는 의견을 준비함. 43개 위원회는 정부와 의회에 직접 자문을 제공하기도 함.

2. 독일

독일의 주요 통계 자료(OECD, 2018)

- 인구 : 8,064만명, 합계출산율 1.5명, 노인인구비율 20.8%
- 경제
 - 1인당 GDP(US \$): 47,979
 - 실질 GDP 성장률(%): 1.7
 - GDP 대비 수출: 46.9, 수입: 38.9
 - R&D에 대한 총 국내지출(US \$): 101,578
- 노동시장, 숙련 및 혁신
 - 15-64세 고용률(%): 74.0, 남: 78.0, 여: 69.9
 - 고용 유형: 파트타임 22.4%, 자영자 11.0%
 - 연간 평균 근로시간: 1,368
 - 실업률(%): 전체실업률 4.6%, 장기실업률 44.0%
- 분배 상태
 - 소득불평등(지니계수): 0.293
 - 빈곤율
 - 전체 : 0.101
 - 아동빈곤율(0-17세): 0.112
 - 근로연령빈곤율(18-65세): 0.100
 - 퇴직연령빈곤율(66세 이상): 0.096
- 조세와 지출
 - 총조세: 37.0%, 1인당 정부 조세(US, \$): 21,273
 - 1인당 정부지출: 20,874
 - 정부지출
 - 일반 공공서비스(%): 28.8
 - 경제개발(%): 9.2
 - 환경보호(%): 1.5
 - 건강(%): 1.7
 - 교육(%): 2.7
 - 사회보호(%): 45.3
 - 사회지출
 - 공적사회지출(%): 24.9
 - 사적사회지출(%): 3.5
 - 순사회지출(%): 24.8
 - 건강에 대한 총 지출(%): 11.1

(1) 독일 복지국가의 성공 비결

□ 유럽의 환자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모델로 주목받는 독일의 성공비결은 무엇인가?

- 독일은 노동시장과 복지레짐에서 2005-2006년에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첫째, 독일 정치시스템, 복지시스템이 천천히 유럽화, 세계화에 반응하고 있음. 독일 모델은 지금도 계속 적응하는 과정에 있음. 한국 및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쟁력 저하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서 1990년대에 산업기술력 저하로 실업률 상승하였음.
- 둘째, 사회복지시스템도 1980년대와 1990년대 고실업 대응해서 적절히 반응하지 못함. 실업자들은 예전만큼 고임금 괜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지 못하게 되었음. 서비스 일자리는 임금수준이 그리 높지 못하며, 이로 인해 예전의 제조업 일자리 실업자들은 실업급여에 이어 실업부조를 받는 것이 저임금 일자리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매력적이게 되었음.
 - 첫 번째 단계로, 일차 부문에서 노조와 기업 간 노사 관계가 예전과 같이 고임금을 감내할 수 없고, 혁신과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함.
 - 두 번째 단계는 규제 영역에서 정치적 역할이 변화하였음.
 -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많은 것이 변화하였는데, 노사정위원회는 새로운 컨설턴트 실시하였으며 노동시장과 급여시스템의 재구조화 시도하였음. 그 결과 사민당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되면서 두 소수파가 동독 정당과 결합하게 되었음. 이것이 독일 정당의 새로운 역동성의 원인이 되었음.
 - 이후 독일의 기업 경쟁력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2006년과 2007년경에는 그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2008년 경제위기로 전체적으로 다시 하락함. 이와 같은 하락이 오히려 독일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함(새로운 프레임과 규칙에 적응하지 못한 1업이 도태되면서 이를 극복한 기업은 더 강해지게 됨. -20년 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다운사이징 등을 단행하였음)

□ 미니잡에 대한 비판과 평가

- 미니잡이 필요악이라고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고 부분적으로는 아닌 부분이 존재함.
- 고임금의 일자리를 위해 투자하기하면 많은 비용이 소요됨. 비교 대상은 고임금 일자리가 아니라 실업 상태로서, 미니잡은 저임금이지만 사회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고, 최저임금 기준 이하의 급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음. 연금생활자, 학생들, 주부 등이 주로 미니잡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해당함. 현재 미니잡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정형적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전망에 대한 독일의 전망과 낙관적 근거

- 장기적으로 불확실한 측면이 많으며,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함. 미국과 중국 같은 강국들에 따라 다르고, 경기주기에 따라 다르며, 인구구조 변화, 이민 등 또한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임.
- 고령화와 사회보장 시스템 역시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연금개혁을 통해 2030년까지 적응하도록 조정된 상태임. 2005년 이후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혁에 집중하고 있음. 2040년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 연금 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에 있음.

[2] 독일 복지국가에의 도전과 대응

□ 최초의 사회보험 실시국, 독일

- 1883 - 의료보장, 1884 - 재해보험, 1889 - 연금 및 장애를 위한 사회보험.
- 1927년 - 독일제국 붕괴. 바이마르 공화국 등장. 실업보험 등장
- 1994 - 장기요양보험 통과
- 모든 이를 위한 복지예산이 960 billion euro이며 거의 GDP의 30%에 해당하였음.

□ 독일의 복지국가는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하였음.

○ 첫째, 인구문제

- 고령화 문제 :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화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음. 많은 사람이 장기 요양 요구하고 있으며 연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이민자 문제 : 중동, 아프리카 등 문화적으로 무슬림 배경의 이민자가 다수(150만)
 - 이민자는 독일어를 원활하게 구사하지 못하고, 일자리 문제에 부딪힘.
 - 젠더 문제, 가족 역할 등에서의 상이한 가치 등으로 문화충돌이 일어나고 있음. ex) 서비스업종에서 남성미용사
 - 극우 세력이 등장하고 있음.
- 세대 갈등: 노인과 젊은이들 간 부담의 문제
 - ex1) 장기요양보험 (350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 259만이 민간시설에 맡겨짐. outpatient)
 - ex2) 가족 케어: 보험금만 받고 실제로는 케어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둘째, 이데올로기 문제

- 10년 동안 사회정의에 대한 대토론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음.
- 공정한 소득 분배 문제: 10% 상위가 50% 정도의 부를 가짐.
- 더 많은 사람들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분절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증폭되고 있음.

○ 셋째, 1989년 동독이 붕괴(사회주의 붕괴) 하면서 정서적 충동과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함.

- 동독의 평균 소득이 서독보다 낮고, 실업률이 더 높으며, 경쟁력이 낮음.
- 동독과 서독 사이에는 수치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격차와 정신적 격차가 있음. 동독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게 취급 받는다고 생각하며 차별받고 있다고 여김.

□ 사회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이민자 문제 : 이민자들의 대다수가 수급자가 되고 있음.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이 일할 노동자들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민자들은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 실제로 고용을 하여 현장에서 일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

- 사회의 역할 : 시장에 맞서 사회의 역할을 복원하는 것은 어려움. 정부가 돈을 제공하고 개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서비스 제공자가 서드섹터로서 역할을 함.
- 재벌 문제 : 풀스마켄, 다임러, 비엠더블유 등 기업들 사이에서의 담합을 막는 공적 기관이 있음. 비엠더블유 등 자동차 회사들이 담합을 하려고 할 때 이를 감독하는 공정위가 같은 것이 있는데, 이 기관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시 통제를 제공함.
- 복지국가와 사회의 역할 : 복지국가와 사회는 가족, 지역, 자선단체 등 자발적인 연대를 통해 발전할 수 있음.
 - 국외 빈국에서 재난이 발생할 때 사람들은 기부를 하나,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녕을 보장하는 것과 다른 것임. 미국은 정부에 기대기보다는 개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원하고 기부하는 시스템이지만, 독일이나 소위 유럽의 복지 선진국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음.
- 인터스트리 4.0 : 대인 서비스, 휴먼 서비스가 매우 필요한데, 장기 요양을 위한 간호사 인력 등이 많이 부족함. 그 이유는 임금이 낮고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가 정치적인 의제화 되어야 함. 장기요양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는 단순히 식사를 가져다주거나 질병을 간호하는 차원에서 넘어 정서적인 케어(이를테면 affection, human touch)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사람들과의 상호관계에서 이와 같은 정서적 지지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임.
-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 복지국가는 독일의 전통으로 여전히 독일 사회의 척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함.
- 기본소득 : 기본소득 실험을 몇 나라에서 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들어가는 재원 등 여러 문제에 비해 나타나는 효과는 크지 않아 부정적인 입장임. 자신의 노력에 비례한 소득을 받으며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3. 덴마크

덴마크의 주요 통계 자료(OECD, 2019)

- 인구: 560만명, 인구 성장률: 0.4%
- 교육 수준: 수학 OECD 39개 국가 중 수학 (남성 6위, 여성 9위), 과학 (남성 16위, 여성 13위), 읽기 (남성 14위, 여성 16위)
- 교육 지출: 1만5626 달러 (tertiary), 1만1467 달러 (early childhood) OECD 회원국 대비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
- (Education spending covers expenditure on schools, universities and other public and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 공적 교육 지출 (GDP 대비): 4.7% (primary to post-secondary non-tertiary)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다음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1.6% (tertiary) 역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 1인당 GDP: 50,685 달러 (2016년), 한국은 37,143달러 (Gross domestic product (GDP) at market prices is the expenditure on final goods and services minus imports)
- 1인당 GDP 성장률: 1.63 (OECD 평균 1.94)- 2018년 기준
- GDP 대비 교역: 수출 54%, 수입 48% (OECD 평균 각각 28%) 한국은 42%, 35%.
-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 (tax on personal income): 24.6% (2017년 기준) 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 OECD 평균은 8.24%. 덴마크 다음으로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 14.5%. (Tax on personal income is defined as the taxes levied on the net income (gross income minus allowable tax reliefs) and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 지니: 0.26 (OECD 국가 중에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다음으로 낮음, 한국은 0.35) - 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 상대적 빈곤율: 5.5% (전체 인구- 2015), 3.1% (66세 이상- 2015) 한국은 17.4% 및 43.8% (2017년 기준)
- 빈곤갭: 0.310 (2015) (한국은 0.355- 2017)
- 여성 정치 참여 비율: 42.9% (한국은 9.1%) 둘 다 2017년 기준
- 가계 부채 비율: 281% (2017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흥미로운 점은 북구 국가들이 대체로 높음 (네덜란드- 243, 노르웨이-236, 호주 216%, 스위스- 212%, 스웨덴 186, 그 다음으로 한국 186% - 스위스 빼고 모두 2017 기준)
- 정부 부채 비율 (GDP 대비): 53% (2015) (일본이 가장 높은 237%)
- 정부 지출: 54.5%로 OECD 세 번째. 핀란드(57.0%), 프랑스(56.8%) 다음. 한국은 32.3%
- 정부 세입 (tax revenue): 45.98% OECD 최고. 다음이 벨기에 (44.6%) OECD 평균 34.19%, 한국은 26.90%
- 법인세 실효세율 (GDP 대비): 3.04% 한국 3.83% OECD 평균 2.87%
- 실업률: 5.1 % (2018년 4분기 기준), OECD 평균은 5.2%
- 청년 실업률: 9.4% (2018년 기준) (OECD는 11.1%)
- 장기실업률: 22.9% (OECD 31.0%) 한국은 1.3%!!
- Gross pension replacement rate: 86%로 크로아티아(105), 네덜란드(97) 다음으로 높음. OECD 평균 53, 한국 39.
- Net pension replacement rate: 80%로 중상위 수준. OECD 평균 63, 한국 45.

□ 1973년과 2008년 덴마크 경제위기의 차이

- 1973년과 2008년의 위기는 일정한 유사성이 있을 수 있음. 수요가 줄어들 때 고용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며, 경제가 돌아오면 고용이 돌아오기 마련임. 덴마크는 그렇게 위기를 넘겼으나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일정부분 감소하였음.
 - 그러나 보편적인 국가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있는데, 소득세 감면을 원하냐, 복지국가를 원하냐를 대중에게 물어보면 70-80%가 복지국가를 원하는 모습을 보임. 20-30% 정도만 소득세 감면을 원하는 경향을 나타냄.
- 사민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가 줄었는가?
 - 덴마크에는 극좌우 진영을 제외하면 5-6개의 사민주의 정당이 있음. 덴마크는 단일한 문화와 종교를 가졌으며 큰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음. 그런데 유입되고 있는 이민자는 큰 틀에서 가족의 일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덴마크의 유연안정성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1800년대부터 1899년, 1907년에 합의가 있었음.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으나 극복하여 유연안정성이라는 명칭이 붙게 됨. 이 개념에 대해 1992-1993년에 네덜란드에서 한 학자가 언급한 바 있음.

□ 제도화된 삼자조합주의 전통

- 네덜란드만큼 삼자조합주의가 제도화 되어 있지는 않음. 몇 가지 조연구구, 이를테면 BER, VEU와 덴마크 경제위원회 (Danish Economic Council) 등이 있음. 덴마크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정책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The Economic Council은 1962-1964에 설립됨. 당시 50명의 경제학자가 참여하였으며, 소득보장에 관해 전성기가 있었던 바 있음. 노조, 비즈니스, 은행 등 3,4명 경제학자가 참여하여 공동의 이해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였음.
 - 한 예로서 2016년 실업보험에 관해 전문가들이 개혁을 위해 모였는데, 그 것이 국회를 통해서 법이 됨. 다른 경우에는 전문가 커미티가 2015년 구성되어, 네명이 ALMP 문제를 협의함. 공무원, 사회적 대화 파트너들이 참여하여 계속 대화와 협의의 과정을 거쳤고 네트워크를 수평적으로 구축해 진행함.
 - 이에 대해 한 정치학자는 덴마크 경제 모델은 협상경제(negotiation economy)라고 불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제도화되지 않은 형식으로는 특정 이슈에 대한 삼자 협상이 있음.
 - 이를테면, 사회통합이나 성인 교육, 노동공급, 기술/자격 문제 등이며, 4자 대화나 Disruption Council 등도 있음.

□ 종교적, 언어적 동질적 복지국가인 덴마크에서 최근 이민의 유입이 가지는 의미

- 최근 덴마크에서 가장 '핫'한 주제이며 많은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 많은 국제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 정치 상황 측면에서 다수는. 1. 난민 억제. 2. 유럽연합 내에서의 이동은 환영 하고 있음.

- 특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었음. 어떻게 통합해야 할지, 격리해야 할지, 혹은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게 해야 할지 등 매우 어려운 사회문제임. 최근에 거주민과 이주민 사이에서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높은 국가 부채의 원인과 대응

- 덴마크는 전 세계에서 가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임.
 - 이런 통계가 나온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경제가 구조화한 방식 때문이기도 함. 실제로 덴마크 가구의 자산은 부채의 2배 정도에 해당하며, 자산은 연금 적립액을 포함함. 더욱이 덴마크는 유연한 저비용의 담보대출 시스템을 갖고 있음. 덴마크 가구들이 부채와 자산을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이유임.
 - 높은 수준의 연금 때문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대에 부채가 어느 정도 있어도 무방하며, 높은 수준의 부채는 덴마크 가계에서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음.
 - 크레딧 유니온에서 80% 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이자 수준에서 대출 가능함. 버블 붕괴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중앙은행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 부채는 큰 문제로 작용하지 않고 있음.

□ 덴마크 실업급여에서 제외되어 있는 15% 정도의 근로자에 대한 대응

- 덴마크 실업급여는 젠트시스템임.
- 실업급여에 제외되어 있는 15%는 청년, 고연봉의 공무원, 이주노동자, 불안정노동자, 노인, 고액 연봉자들로 다양함.
- 85%는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음. 그 중에 10~12%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15%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음.

□ 과거에 매우 높았던 노인빈곤율이 급감한 이유

- 빈곤의 문제는 과거에는 노인의 문제였음. 몇 가지 노동시장에서 연금 정책이 있었고, 1990년대부터 작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입의 50%를 세금으로 지불하여 조달됨.
- 1990초에 노동시장보험이 있었는데, 이는 블루칼러 워커 대상이었음.
 - 노조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기여금의 수준은 달랐음.
 - ex.) 학자는 월 수입의 16%를 집단연금펀드로 지불했음. 연금 커버리지를 확장하여 이제는 95%의 노동인구를 커버하게 되었음.
- 연금의 충분성 : 베이직 연금은 1000 유로. 혼자라면 1800 유로를 받고 있음. 그래서 연금 받으면, 노인들은 남쪽으로, 스페인이나 그리스로 가서 몇 년간 머물다가 아프면 돌아오는 경우가 많음. 연금기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직업훈련 등)

- 산업화 과정에서도 비슷한 위기가 있었음.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우버처럼 일자리가 다양한 형태로 늘 것으로 예측함.

- 작은 회사들을 큰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을 제외하면 덴마크 내 작은 회사들의 비율이 많이 줄게 됨. 큰 회사와 작은 회사의 임금 격차가 적으며, 80% 정도가 collective agreement의 적용을 받아 차이가 크지 않음. 이에 따라 소득불평등도 비교적 작다고 할 수 있음.

□ 유연안전성 모델로 인한 불안정성(매년 최대 20-25%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실태와 대응

- 계절적 실업, 특히 건설업 쪽에서 불안정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 2010~2011년에 불안정성이 매우 안 좋았는데, 2.4 million 노동 가능 인구 가운데, 거의 20%가 실업을 경험하였음. 고용주가 건설업계에서는 1주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거나 공적분야에서도 9개월 앞두고 해고를 통보하기도 함.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급여의 질이 중요함.
- 직업훈련은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서, 공적인 지출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음.
 - 1) unpaid training - 급여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 시스템 (최대 4주)
 - 2) job training (6주) - 소득을 정부가 지원
- 현재 실업보험의 위축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인덱세이션이 소득 증가분을 따라가지 못해 급여가 줄었음. 수급 기간 또한 2010년에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줄었음. 2015-2018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급여 수급기간을 타협한 결과 실업 2년 기간 동안 일정한 고용이 있었다면 실업 급여 기간을 3년 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음.
-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예전에 비해 좋지 않기 때문에, 해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노조에서 요구하기 시작함. 노동자를 6년 이상 고용 후 해고하면 일정한 돈을 주어야 하는 형태로 변경.